

美 트럼프 정부에 탄핵까지... 재계, 글로벌 시장 대응 분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대적 인사... IRA 폐기 대응책 마련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장단 협의회... '빠른 실행력' 주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국내·외서 타운홀 미팅 '소통강화'

최태원 SK 회장

배터리사업 살피고 AI·DT 역량 결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 재판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및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두 탄핵 가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던 재계는 헌법 재판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내년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사업 전략 마련에 집중한다.

이재용 회장은 연말 경영진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략을 위한 전략

을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분야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경쟁사에 크게 뒤처지자 대대적인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5년 가까이 이 회장의 경영 족쇄간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 재판도 준비해야한다. 부당합병 의혹 사건 2심 선소가 내년 2월 3일 내리

진다. 구광모 LG 회장은 글로벌 대응 방안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 회장은 지난 12일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영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최고경영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위협이 현실화하는 등 국내외 경영 환경의 위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집중력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중장기 미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더욱 치열한 고민과 속도감 있는

'빠른 실행력'을 주문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내년 사업 전략 논의에 집중한다. 정 회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에서도 타운홀 미팅을 진행, 임직원과 소통을 강화하며 미래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12일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면서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진용을 갖추고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을 겸직하고, 외국인 최초로 현대차 사장에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한국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정 회장을 정점으로 장 신임 부회장, 무뇨스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는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신년사와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연례 업무는 그대로 수행할 계획이다. 대신 그룹 차원의 일정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경영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배터리 사업을 살리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T)에 역량을 결집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지정학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기업들이 향후 세계 시장 사업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영진이 수시로 소통하며 새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시장 동요 방지... 국정공백 최소화를”

경제단체들, 국정혼란 대응 촉구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 하고 국회, 초당적 차원 여야간 협치를 정책수단 총동원 소상공인 살려야”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길 염원하고 나섰다.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철저한 대응도 촉구했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입장문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통해 경제, 산업 각 분야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아울러 “국내 정치 상황의 향방을 떠나 진취적인 외교와 기업 맞춤형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고관세, 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결이 통과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에서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대한상공회의도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코멘트’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를 향해서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향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넘기고 이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권은 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 협의체 협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도 함께해 명실상부한 경제·민생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차별히 기업 운영과 생산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중견련도 “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군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아래, 기민한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과감한 투자와 채용 확대를 통해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들도 경제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모든 국정, 헌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한덕수 권한대행-美 바이든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그 회복력을 평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15분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이뤄진 통화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



이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서예진 기자 syj@

권성동 “국힘, 여전히 여당” 野 제안 거부

>> 1면 ‘이재명 혼란 수습...’서 계속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성과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

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에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 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